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23

목 차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요	11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11
1.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11
1.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의 필요성	11
1.2.1. 필요성	11
2. 용어의 정의	12
3. CP 8대 구성요소	13
3.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13
3.2.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13
3.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13
3.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13
3.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13
3.6. 내부감시체계 구축	14
3.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4
3.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14
제2절 공정거래법과 업무 시 유의사항	15
1. 공정거래법 개요	15
1.1. 공정거래법 구성	15
1.2. 주요 내용	15
1.3.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관련 조항	15
1.3.1.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15
1.3.2.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5
1.3.3. 불공정거래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15
2.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17
2.1. 주요내용	17

2.2 성립요건	17
2.2.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17
2.2.2 경쟁제한성 존재	17
2.3 합의추정제도	18
2.4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19
2.4.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19
2.4.2 상품의 생산, 거래 혹은 영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0
2.4.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20
2.4.4 관련 사례	21
2.5 위반시 제재	22
2.5.1 행정적 제재	22
2.5.2 형사적 제재	22
2.5.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22
2.6 업무 시 유의사항	23
2.6.1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23
2.6.2 경쟁사 관련 유의사항	23
2.6.3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24
2.6.4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24
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5
3.1 개요	25
3.2 유형	25
3.2.1. 거래거절	25
3.2.2 경쟁자와의 거래금지	27
3.2.3 불이익제공	28
3.2.4 차별취급	29
3.2.5 거래강제	30
3.3 관련사례	31
3.4 제재 내용	32

3.4.1 행정적 제재	32
3.4.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32
4. 계열사 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33
4.1 원칙	33
4.1.1 합의 필요사항	33
4.1.2 계열회사 편입/제외 신고 프로세스	34
4.1.3 기업결합 신고 프로세스	34
4.1.4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프로세스(자금, 자산, 유가증권 거래) ...	34
4.1.5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프로세스(상품용역 거래) ...	34
4.1.6 기업집단 현황 공시 프로세스	35
4.2. 일반부당지원행위	35
4.2.1 정의	35
4.2.2 위법성 판단기준	35
4.2.3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38
4.2.4 관련사례	40
4.3 내부거래시 제재조치	43
4.3.1 행정적 제재	43
4.3.2 형사적 제재	45
4.3.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45
제3절 하도급법과 업무 시 유의사항	46
1. 개요	46
1.1 하도급거래의 기본개념	46
1.1.1 적용 거래 (하도급거래)	46
1.1.2 제조위탁	47
1.1.3 용역위탁	50
1.1.4 수리위탁 및 건설 위탁	51
1.1.5 법적용 대상 사업자	52
1.1.6 법적용대상 기간	54

1.2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55
1.2.1	개념	55
1.3	발주자의 의무사항	55
1.3.1	개념	55
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56
2.1	서면발급 및 서류의 보존 (하도급법 제 3조)	56
2.2	위탁시 기재사항	57
2.3	용역위탁시 서면내용시 주의 사항	57
2.3.1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의 기재	57
2.3.2	산정방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기재	58
2.3.3	예외적인 서면의 교부방법	58
2.3.4	당초 서면의 교부	59
2.3.5	보충서면의 교부	59
2.3.6	서면 사전 교부 예외	60
2.3.7	법위반 사항(Don'ts)	60
2.3.8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하도급법제3조 제5항)	61
2.3.9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절차	61
2.4	주의 사항	61
2.5	관련 사례	65
2.6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하도급법 제 9조)	65
2.6.1	주요내용	65
2.6.2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에 대한 세부사항	66
2.6.3	업무상 유의사항	67
2.6.4	관련 사례	67
2.7	하도급대금 지급의 의무 (하도급법 제 13조)	68
2.7.1	주요내용	68
2.7.2	지연이자 및 수수료	68
2.7.3	법위반 유형(Don'ts)	69

2.7.4 업무 시 유의사항	70
2.7.5 관련사례	70
2.8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무 (하도급법 제 16조)	71
2.8.1 주요내용	71
2.8.2 조정기준	72
2.8.3 조정기일	72
2.8.4 업무 시 유의사항	72
2.8.5 관련 사례	74
2.9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74
2.9.1 주요내용	74
2.9.2 범위반 유형(Don'ts)	75
2.9.3 업무상 유의사항	75
2.10 선급금 지급의 의무(하도급법 제 6조)	75
2.10.1 주요내용	75
2.10.2 범위반 유형(Don'ts)	76
2.10.3 업무 시 유의사항	76
2.10.4 관련사례	77
2.11 관세 등 환급금 지급의 의무 (하도급법 제 15조)	77
2.12 내국신용장 개설의 의무 (하도급법 제 7조)	78
3.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78
3.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 4조)	78
3.1.1 주요내용	78
3.1.2 부당성 판단 기준	80
3.1.3 범위반 유형 (Don'ts)	81
3.1.4 업무상 주의 사항	88
3.1.5 관련사례	88
3.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 5조)	91
3.2.1 주요내용	91

3.2.2	법위반 유형(Don'ts)	91
3.2.3	업무상 유의사항	91
3.3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하도급법 제 8조)	92
3.3.1	주요내용	92
3.3.2	판단기준	92
3.3.3	법위반 유형(Don'ts)	93
3.3.4	업무 시 유의사항	94
3.3.5	관련 사례	95
3.4	부당 반품의 금지 (하도급법 제 10조)	96
3.4.1	주요내용	96
3.4.2	법위반 유형(Don'ts)	97
3.4.3	업무상 유의사항	98
3.4.4	관련 사례	98
3.5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 11조)	99
3.5.1	주요내용	99
3.5.2	판단기준	99
3.5.3	법위반 유형(Don'ts).	100
3.5.4	업무시 유의사항	102
3.5.4	관련사례	103
3.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하도급법 제 12조)	104
3.6.1	주요내용	104
3.6.2	법위반 유형(Don'ts)	104
3.7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 12조의 2)	105
3.7.1	주요 내용	105
3.7.2	법위반 예시	105
3.7.3	업무상 유의사항	105
3.8	기술자료제공 요구 등 금지 (하도급법 제 12조의 2)	105
3.8.1	주요내용	105
3.8.2	기술자료의 범위 (공정위 예시 기준)	108

3.8.3	법위반 유형(Don'ts)	110
3.8.4	업무상 유의사항	110
3.8.5	관련사례	111
3.9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하도급법 제 17조)	113
3.9.1	주요내용	113
3.9.2	업무시 유의사항	113
3.10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하도급법 제 18조)	113
3.10.1	주요내용	113
3.10.2	공정위에서 고시한 요구가 금지된 경영상 정보	114
3.10.3	법위반 유형(Don'ts)	114
3.10.4	업무시 유의사항	115
3.11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법 제 19조)	115
3.11.1	주요내용	115
3.11.2	법위반 유형(Don'ts)	116
3.12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법 제 20조)	116
3.12.1	주요내용	116
3.12.2	법위반 유형(Don'ts)	116
3.12.3	업무상 유의사항	116
3.13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법 제 3조의 4조)	116
3.13.1	주요내용	116
3.13.2	법위반 유형(Don'ts)	117
3.13.3	업무상 유의사항	117
3.13.4	관련사례	118
4.	위반시 제재	119
4.1	개괄	119
4.2	양벌규정	120
4.2.1	규정내용	120
4.2.2	규정취지	120

4.2.3 보복조치에 대한 벌칙 강화	120
4.3 벌금	121
4.4 과태료	121
4.5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요청권	122
4.6 손해배상책임	122
4.7 과징금	122
4.8 과징금액 산정 단계	123
4.9 하도급 대금 자진 시정시 과징금 미부과	124
제4절 공정거래 사건 처리절차	125
1. 공정위 조사절차	125
1.1 조사 주체	125
1.2 조사 단서	125
1.3 배당과 사전심사	125
1.4 사건번호·사건명 부여와 조사의 실시	125
1.5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	126
2. 공정위 심판절차	127
2.1 심판 주체	127
2.2 주심위원 지정과 심결보좌	127
2.3 심의기일 및 장소의 지정	127
2.4 합의	127
2.5 의결서 작성	128
3.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128
3.1 심판기능으로서의 공정위	128
3.2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130
3.2.1 인지단계	130
3.2.2 조사·심사 단계	130
3.2.3 심의·의결 단계	131
3.2.4 의결 결과 통지	131

3.2.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131
3.3.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131
3.3.1	심의준비 절차제도	131
3.3.2	심의 속개제	131
3.3.3	심의 분리제	132
3.3.4	출석 시차제	132
3.4	불복절차	132
3.4.1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132
3.4.2	행정소송	132
3.5	사전 심사 청구 제도	133
3.6	동의명령제도	133
3.7	전속고발권	133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요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1.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 ①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 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 ※ 「자율준수편람」 또는 「자율준수매뉴얼」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자율준수편람을 말한다.

1.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의 필요성

1.2.1 필요성

- ①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 ②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 예방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 예방을 위한 CP의 구축은 필수조건이다.
- ③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회사는 자율적 준수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경쟁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 ①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 ②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다.
- ③ “계열사”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계열사를 말한다.
- ④ “직원”이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⑤ “거래업체(거래상대방)”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사 및 공급업체를 말한다. 수급사업자라는 말로도 사용된다.
- ⑥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자를 의미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하도급법 상의 원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위탁사업자”란 용어로도 사용된다.)
- ⑦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⑧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⑨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란 상기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한다.
- ⑩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입 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한다.

3. CP 8대 구성 요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CP의 구성요건, 평가기준, 모범적 설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CP의 구성요소로 아래의 8가지 사항을 규정하였다.

3.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2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3.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3.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감사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3.7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공정거래법과 업무시 유의사항

1. 공정거래법 개요

1.1 공정거래법 구성

- ① 정식명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② 총 14장 71조로 구성

1.2 주요 내용

-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②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사항)
- 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④ 사업자 단체
- 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⑥ 전담기구 및 조사 등의 절차
- ⑦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적용 제외

1.3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관련 조항

1.3.1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 ① 회사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매각 등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만 함.

1.3.2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①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규제를 받음

1.3.3 불공정거래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1) 불공정행위의 금지

-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④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⑤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⑥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⑦ 기타 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부당공동행위 관련 유의사항

2.1 주요내용

- ① 둘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 행위를 카르텔(Cartel)이라고도 한다.
- ②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직접 유발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는 분야이다.
- ③ 적발이 어려우므로 담합에 참가한 내부자들의 신고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과정에서 담합을 인정하고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어 조사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2.2 성립요건

2.2.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①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포함한다.
- ② 이해한다는 눈짓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당초부터 합의에 따른 의사가 없이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된다.
- ③ 법원은 합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르텔이 성립된다.

2.2.2 경쟁제한성 존재

- ①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수량·품질·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② 가격담합 및 입찰담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므로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주의하여야만 한다.

2.3 합의추정제도

①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카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

가.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1>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예2>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예3>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 결정을 위한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경쟁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나.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1>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예2>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다.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1>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예2>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 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예3>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②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들은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③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다.

2.4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및 업무시 유의사항

2.4.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1) 주요내용

- 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당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2) 법 위반 유형(Don'ts)

- ①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②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 ③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 ④ 과당경쟁금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행위

2.4.2 상품의 생산, 거래 혹은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1) 주요내용

- 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 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2) 법위반 유형(Don'ts)

-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할 것을 합의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경우
- ②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경우

2.4.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1) 주요내용

- ①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위반 유형(Don'ts)

- ①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합의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
- ② 공동행위 참가사업자 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③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④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2.4.4 관련 사례

<화물운송용역 입찰 등에서 담합한 5개사 제재> (2020.04)
<p>[사실관계]</p> <p>두산(주) 및 현대삼호중공업(주)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및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 임대 입찰 등에서 사전에 선정한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 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 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p>[공정위 판단]</p> <p>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고, 향후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p>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 등으로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 사례>
<p>(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참가 7개 사업자의부당한 공동행위 건, 2013부사0983, 의결 제2013-202호)</p>
<p>[사실관계]</p> <p>7개 사업자(지산산업, 해성, 한려케미칼, 청해광업, 해광, 베스트, 성광산업 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들은 농협중앙회의 2012년도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 11. 8. 농협중앙회(서울 중구 충정로 소재)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참석 한 후 다음 날의</p>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인근에 소재한 B호텔(서울 중구 ○○로 소재)에 투숙하였으며, 동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물량을 배분하였다. 피심인들은 최종 합 의한 바와 같이 2011. 11. 9. 농협중앙회 입찰장에서 투찰하였으며, 동 입찰에는 피심인들만 이 응찰하여 피심인들 모두가 합의된 투찰물량대로 톤당 144,900 ~ 145,000원의 투찰단가에 낙찰 받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위 판단]

농협중앙회의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함으로써 농협중앙회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다(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5 위반시 제재

2.5.1 행정적 제재

- ①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공정위는 명할 수 있다.
- ②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10% 한도내에서 부과하게 된다.

2.5.2 형사적 제재

- ①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② 양벌규정(제7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이 가능하다.

2.5.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입은 제3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6 업무시 유의사항

2.6.1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주의욕, 사업 활동실적, 대상, 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사업자와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동종 업체간에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2.6.2 경쟁사 관련 유의사항

- ①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 팩스, 이메일은 물론 전화 통화 등 일체의 수단이 포함된다.
- ②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초안 또는 결정(안) 등을 보여주거나, 주고받는 행위도 아니 된다.
- ③ 경쟁사에게 향후 제품개발, 생산량 계획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말아야 한다.
- ④ 경쟁사로부터 가격, 거래조건 등의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⑤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사자료나 거래처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하여야만 하고 입수경위와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Ex: oo일자 oo일보, XX Consulting 회사, 영업사원별 추정취합 자료 등)

2.6.3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 ①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하고 상품 관련 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문서 내용에 분명히 표현하여야 한다. (특히 경쟁사가 유사한 시기 또는 내용으로 상품 내용으로 상품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② 경쟁사업자의 가격 또는 계획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정보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경쟁사업자와 모임을 가질 경우 안건이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6.4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 ① 업계모임 참여자는 사전에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모임 참여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는 신고서 검토 및 참여자 면담을 거친 후 참여 승인 또는 금지를 하거나 필요시 모임 내용을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업계모임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판매, 공급 등 모든 가격, 거래조건 등 공정거래 법에서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는다.
- ④ 업계모임에서 참석한 이후 작성하는 회의록 등에는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한 의견 개진 사항 등을 협의한 것처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3.1 개요

- ① 협력사 및 대리점과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협력사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 ② “우월적 지위남용”이란
 - “우월적 지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것)
 - “남용”(=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협력사는 거래를 계속하지 못 하면 사업경영상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므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요청이 자기에게 불이익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열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 ④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 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변경가능성, 사업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협력사 혹은 대리점이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라고 하여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공정거래 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3.2 유형

3.2.1. 거래거절

(1) 주요내용

- ①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 ②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2) 거래거절 행위의 상세 내용

① 거래거절의 위법성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관련 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한다.

② 이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사업영위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나.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대체거래선을 큰 거래비용 없이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거절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다.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라.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마.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③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외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가.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다.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 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라.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④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의 일환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 또는 사업활동 방해(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3) 법 위반 유형(Don'ts)

- ①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 ②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③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④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3.2.2 경쟁자와의 거래금지

(1) 주요 내용

- ① 협력사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②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상세 내용
 - 가. 부당하게 협력사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력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협력사에게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금지이유

- ① 협력사와 거래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시킬 경우,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자신의 독점력을 강화, 유지할 수 있으며, 협력사의 파트너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 법 위반 유형(Don'ts)

- ①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경우
- ② 당사가 구입하는 제품 등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3.2.3 불이익제공

(1) 주요내용

- ① 협력사(공급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상세 내용

- ① 협력사들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 항, 저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들로는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부품 등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3) 법 위반 유형(Don'ts)

- ①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 ② 협력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 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③ 거래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④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지연,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⑥ 납품지시 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 ⑦ 협력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 공급물량감축 행위

3.2.4 차별취급

(1) 주요내용

- ① 특정 협력사에게 부당하게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② 부당하게 협력사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2)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의 상세내용

- ①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거래조건 차별(이행방법이나 대금의 결제조건 차별 등)

나. 거래조건에는 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 등이 포함된다.

(3) 법 위반 유형(Don'ts)

- ①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품공급비중에 따라 지급기간이나 현금지급 비율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행위

- ②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구매하면서 현저하게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3.2.5 거래강제

(1) 주요내용

- ① 협력사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될 수 있다.
- ②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할 수 있다.

(2) 거래강제 행위의 상세내용

- ①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상업적 용도나 기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②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사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3) 법 위반 유형(Don'ts)

- ① 인기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같이 구매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②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 보수 서비스 (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3.3 관련사례

<p><특정사업자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례> (대구동구·경산지역 8개 레미콘제조사의 공동거래거절행위 건, 2012구사2,의결 제2013-152호)></p>
<p>[사실관계]</p> <p>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특정사업자에게 레 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였다.</p>
<p>[공정위 판단]</p> <p>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로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으로 레미콘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 하여 공정거래법(2011. 12. 2. 법률 제 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시정명 령을 부과하였다.</p>

<p><대리운전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의 약정을 체결, 운영한 사례 (주)이루온 엘비에스의 구속조건 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 2019-133호 2019. 6. 24)</p>
<p>[사실관계]</p> <p>피심인은 자신의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들에게 지원금 또는 무이자 대여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지급한</p>

지원금 전액 반환, 위약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약 정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위반한 대리운전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1. 피심인은 자신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자신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조항 을 적용하여 대리운전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과징금 1,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4 제재 내용

3.4.1 행정적 제재

- ① 시정조치: 위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 ②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2% 한도 내에서 부과되,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5 억원 내에서 부과(부당지원은 별도 기준 적용). 단,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억원내에서 부과하게 된다.

3.4.2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협력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4. 계열사 간 거래 관련 유의사항

4.1 원칙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매입거래의 경우 내부거래 Process에 따라 유관부서의 합의를 거쳐야만 한다.

4.1.1 합의 필요사항

(1) 타사 주식의 취득/처분/변동

- ① 개념 : 타사 주식 취득으로 지주사 체계 내 계열사가 되거나, 계열사 소유 지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행위제한 요건 준수를 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② 유형 : 1) 신규회사 설립(단독 혹은 공동), 2) 계열사, 비계열사 주식 취득 및 보유 지분율 변동(증가 혹은 감소) 등

(2) 등기임원 변동

- ① 개념 : 등기임원 겸임으로 비계열사가 지주사 체계 내 계열사가 되는 경우 행위제한 요건 준수를 위한 사전 검토 필요함
- ② 유형 : 1) 자사 등기임원의 선임/해임, 2) 자사 등기임원의 타사(비계열사) 겸임 등

(3) 자사 주식의 취득/처분/변동

- ① 개념 : 자사 주식의 증가/감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 보유한 모회사의 행위제한 요건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필요함
- ② 유형 : 1) 증자 또는 감자, 2)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청구, 신주인수권 또는 스톡 옵션 행사 등

(4) 기타 주요 경영 의사결정

- ① 개념 :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계열사 편입 또는 지분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장/공동출자법인의 경우 지분율 요건이 상이하므로 변동사항 있을 시 사전 검토 필요함
- ② 유형 : 1) 합병/분할, 2) 상장/상장폐지, 3) 공동출자법인 미해당 등 주주간 주요협약 변경 등

4.1.2 계열회사 편입/제외 신고 프로세스

- ① 개념 : 계열편입/제외 신고사유 발생시 담당부서에서 윤리경영부서에 신고요청하며, 윤리경영부서는 검토 후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에 신고
- ② 유의사항 : 계열 편입/제외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초일불산입) 신고기한 준수하여야 하며 판단착오에 의한 신고 누락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4.1.3 기업결합 신고 프로세스

- ① 개념 :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업결합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 완료 전, 공정위 기업결합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함
- ② 유의사항
 - 가. 사전심사(임원겸임 유형을 제외) 원칙이며,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통지 이후 기업결합 행위 완료 가능(단, 임원겸임은 사후신고)
 - 나.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 본 신고시 사전 심사와 중요 사실이 동일할 경우, 15일 이내 동일한 판단으로 심사결과 최종 통지

4.1.4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프로세스(자금, 자산, 유가증권 거래)

- ① 개념 : 거래 발생 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동일인 관련자와 1) Max(자본총계 or 자본금) 곱하기 5% 또는 2) 50억 원 이상 거래가 예상되는 자금·자산·유가증권·인력 등의 거래 시 이사회 의결 → 의결일로부터 1일 이내 공시
- ② 유의사항
 - 가. 거래상대방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교·확인하여 거래회사 간 상이한 공시를 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나. 중요사항 변경(거래금액 20% 이상 증감, 거래조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변경 공시
 - 다. 공시여부는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공시내용은 이사회 이사록 등의 근거서류와 일치 → 누락 또는 허위공시로 인한 위반 발생 방지

4.1.5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프로세스(상품용역 거래)

① 개념 : 분기시작 전, 동일인 및 친족이 20% 이상 지분보유 계열회사 및 그의
상법상 자회사와 1)Max(자본총계 or 자본금) 곱하기 5% 또는 2) 50억원
이상 거래가 예상되는 상품·용역거래 건별 이사회 의결 → 의결일로부터
1일 이내 공시

② 유의사항

가. 중요사항 변경(거래금액 20%이상 증감, 거래조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변경 공시

나. 공시여부는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공시내용은 이사회 이사록 등의
근거서류와 일치 → 누락 또는 허위공시로 인한 위반 발생 방지

4.1.6 기업집단 현황 공시 프로세스

① 개념 : 기업집단 대표회사 및 각 계열회사별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연간/분기별
분기종료 후 2개월 이내 공시

② 유의사항 : 공시여부는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공시내용은 이사회 이사록 등의
근거서류와 일치 → 누락 또는 허위공시로 인한 위반 발생 방지

4.2. 일반부당지원행위

4.2.1 정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상당히 유리한 조건)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상당한 규모의
물량, 몰아주기)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4.2.2 위법성 판단기준

(1) 지원행위성

① 비정상가격으로 거래

지원행위란 지원주체(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지원을 받는 회사(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가격이 지원받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② 지원행위 여부 판단기준

가.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경제적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인간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나. 정상가격 판단 기준 :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은 ‘자금거래에 의한 지원행위’의 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을 준용한다.

다. 개별정상금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 가능한 금리를 말한다.

- a.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 b. 지원객체가 지원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 전·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 c.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지원객체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 d.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간, 금액, 장단기 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e. 지원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

- ③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여기서 월별평균차입금리는 지원객체가 당해 월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 ④ 다만, 상기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거나, 적용 순서를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지원주체의 차입금리가 지원객체의 차입금리보다 높은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2) 상당한 부당이득 발생

① 개념

지원주체가 자금·자산·인력 등의 거래를 통해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② 상당성

당해 지원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고).

③ 부당성

가. 부당지원 의도 :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판결 등 참고)

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부당성 판단기준: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강화할 우려, 경쟁사업자 배제우려,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다른 사업자의 신규시장진입 저해

※ 업무상 유의사항

단순한 사업상 필요 또는 거래상 합리성이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래의 부당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시장가격 산정이 곤란할 경우, 거래가격이 합리적 수준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4.2.3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1) 자금지원

① 유형

계열회사에 대한 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 명목의 자금 제공, 기업어음, 사채 저리인수, 후순위사채 매입, 전환사채인수 및 전환행위 등을 포함된다.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이후에 회수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된다. 출자행위 성질을 갖는 신주인수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② 판단기준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

- 가.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개별정상금리)
- 나. 개별정상금리 산정이 어렵고 개발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평균 당좌대출금리(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경우 일반정상금리
- 다. 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일반정상금리) 차이가 7% 미만,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금융상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된다.

(2) 자산 지원

① 유형

- 가.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저가매도한 경우
- 나. 임차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전대한 경우, 계열사로부터 임대료를
고의로 늦게 받는 경우
- 다.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공동개발한 무체재산권을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단독
특허 출원하도록한 경우

② 판단기준

정상가격(시가)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 판단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 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상품 및 용역 지원

① 유형

-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행위
- 나. 계열 증권사를 이용한 무보증사채 인수행위
- 다. 자회사에게만 특별판매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
- 라.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 과다지급행위
- 마. 계열사에게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경우
- 바. 경쟁입찰로 진행시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② 판단기준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자금거래나 자산거래에 비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조건의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계약체결 방법 (수의계약/경쟁입찰), 체결절차(협상과정 등)등을 고려한다.

(4) 통행세

① 유형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거래과정에서 역할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회사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유형

나. 거래과정에서 추가된 회사가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역할에 비해서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형

② 유의사항

가.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확인한다(계열사의 구체적 역할).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거래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는 후 불리, 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다. 지급금액은 그대로인데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비계열사에는 그만큼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2.4 관련사례

<p><기계장치 등을 임대하면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례></p> <p>(엘에스와 엘에스 전선의 부당한 지원행위건, 2015시감2699, 의결 2017-174호)</p>
<p>[사실관계]</p> <p>엘에스와 엘에스 전선(이하 “피심인들”)은 파운텍에게 기계장치 등을 구입 후 즉시 임대하는 과정에서 신설회사인 파운텍이 컴파운드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임대료 미수령 및 저가임대, 보험료 공제를 통한 임대료 감액, 임대료 지급 기한 장기설정, 임대료 지연이자 미수령, 저가매각 등의 지원행위가 존재하였다.</p>

[공정위 판단]

피심인들은 ① 파운텍의 설립초기 피심인들이 매입하여 바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담지원한 기계장치 등의 취득가액 8,038백만 원은 파운텍 자본금 40억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라는 점, ② 피심인들이 임대한 기계장치 등은 파운텍의 전체 공장설비 중 91.5%(2005년 6월 파운텍의 보험가입자산 기준)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점, ③ 피심인들의 이 사건지원행위로 인해 파운텍 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발생한 기간(2004년 ~2011년) 동안 매출액이 약 7,600% 가량 급성장하였다는 점, ④ 이 사건 지원금액 총 합계액(약 15억 원)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파운텍 영업이익 합계액(약 226억 원)의 약 6.6%, 당기순이익 합계액(약 152억 원)의 약 9.9%에 상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파운텍에게 과도한 경제 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조건 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파운텍에게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컴파운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향후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금지명령을 하며, 피심인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인 파운텍이 얻게 된 경제상 이익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따른 관련시장(컴파운드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피심인 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거래실질 상 편법적인 자금대여에 해당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 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6. 12. 30. 공정거래위원 회 고시 제2012-22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마. (1)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계열사 부담 지원 사례>

(삼양식품의 부담지원행위건, 의결 제2015제감0797)

[사실관계]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라○○ 등 자신의 직원 11명에게 계열회사인 에코 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하였고, 소속 임 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다. 삼 양식품 소속인 이○○는 2007. 5. 31. 부터 2011. 3. 28. 까지, 그리고 박○○은 2011. 3. 29. 부터 2015. 3. 31. 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였다.

[공정위 판단]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인력을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대신 부담 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를 지원하였고,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0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개별 정상금리를 산정하지 아니한 채 일방 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4.6.12, 선고2013두4255)

[사실관계]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21억 원을 차입하는 데에 원고 웅진홀딩스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예금 600억 원과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웅진 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인 5.50~5.87%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자금지원이 있었다.

[공정위 판단]

법원은 피고(공정위)가 그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거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은행이 웅진폴리실리콘 또는 웅진폴리실리콘과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 대출 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위 실제 적용된 금 리와 일반정상금리인 6.83~7.07%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p><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통한 부당 지원 사례></p> <p>(롯데피에스넷의 부당지원행위건, 2012서감1294)</p>
<p>[사실관계]</p> <p>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 9월부터 2012. 7월 현재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舊 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하였다.</p>
<p>[공정위 판단]</p> <p>피심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면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649백만원) 을 부과하였다.</p>

4.3 내부거래시 제재조치

4.3.1 행정적 제재

(1) 시정조치(공정거래법 제24조)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시행령 별표2)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1차

조정)과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후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과징금을 결정하게 된다.

(3) 내부거래시 공정위는 최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내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지원금액*부과기준을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 유형	관련 조문	산정기준
일반부당 지원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 규모의 100분의 10을 지원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 의 차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위반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 규모(법 제23조의 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위반금액으로 본다.

※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4.3.2 형사적 재제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1항 7호)를 하였거나 사익 편취행위를 특수관계인이 지시하였거나 관여한 경우(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1항, 4항)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법 제66조).

4.3.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56조).

제3절 하도급법과 업무시 유의사항

1. 개요

1.1 하도급거래의 기본개념

- (1)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이면서 강행법규이다.
(하도급법에 위반된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라도 처벌을 받음)
- (2) 하도급법은 양사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서면발행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원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위반행위의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나 수위탁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 (3) 하도급법의 주된 목적은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의 수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4)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금지사항,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1차적인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1.1.1 적용 거래 (하도급거래)

- (1)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 도급법 제2조 제1항).
- (2)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제조(건설기계 제조, 각종 부품 제조위탁), 용역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정보성 과목에 대한 용역 위탁), 수리(기계 수리)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

1.1.2 제조위탁

(1) 제조위탁 관련 여러 개념 정의

- ① 「제조위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품질·성능(性能)·형상(形狀)·디자인·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업(業)으로서」: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 등록 등에 기재한 영위업종이나 정관상 기재된 사업목적 등을 참조)
- ③ 「제조」: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해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가공」이란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함에 의해 일정한 가치를 부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④ 「물품」: 동산을 말하며 부동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물품 그 자체의 제조위탁은 일반적으로 제품 외주 또는 완성품, 외주로 불리는 하도급거래이다.
- ⑤ 「반제품」: 목적물인 물품의 제조과정에 있는 제조물을 말한다.
- ⑥ 「부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 상태대로 장치하여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제조물을 말한다.
- ⑦ 「부속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대로 장치(裝置)시킨다든지 목적물인 물품에 부속시킴에 의해 그 효용을 증가시키는 제조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품이나 제품에 부착시키는 명판, 라벨 등을 말한다.
- ⑧ 「원재료」: 목적물인 물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원료, 재료)를 말한다.
- ⑨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해 물품 등의 형상을 본뜬 금속제의 물품을 말한다. 나아가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물품 등을 제조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 그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케 하려고 위탁하는 경우의 금형도 포함한다.

(2) 제조위탁의 유형

① 유형 1

물품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제품, 중간제품, 특별주문재료 등의 제조·가공외주, 제조 공정 중의 검사·운반 등의 작업외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아가 판매하는 물품의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도 해당된다. 또한, 판매하는 물품의 부속품(취급설명서·보증서, 용기, 포장재료,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나.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및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포함)를 위탁하는 경우에, 조립외주(제품조립, 완성품 조립 등), 가공외주(기계가공, 프레스·판금 등), 부품외주(스프링 등), 금형외주 등이 포함한다.

② 유형 2

물품의 제조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어떤 종류의 제품에 관해 수주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 즉,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가공」을 도급 받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유형 3

물품의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에서 수리하고 있는 기계수리에 필요한 특수부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제조위탁 해당여부 판정기준

①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에 해당 여부 확인

가.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된다.

② 하도급법(제2조제1항)상 제조위탁거래의 해당 여부 확인

가. “원사업자의 위탁행위”

나. “수급사업자의 제조행위”

다. “위탁 받은 것을 제조하여”의 세가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규격품/표준품을 구입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순구매).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격품·표준품일지라도 가공 등을 시킨 경우에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된다.

마. 수입한 Chemical 제품에 당사가 지정한 첨가제를 투입하여 납품하는 제품의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바. 제품을 당사가 주문한 기준에 따라서 단순 소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

사. 위탁 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 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 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하도급 거래에서 제외되는 위탁행위

① 자가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

②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③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1.1.3 용역위탁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

- 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서 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이 정보성과물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② 자신이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이의 성과물의 작성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사업자가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예: 사내에서 사용하는 회계용 소프트웨어, 자사의 홈페이지)의 작성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역무의 공급 위탁

- ①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나.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개발·공급 및 컨설팅, 자료입력 등 단위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활동
다. 위탁을 하는 사업자가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 시험, 분석, 사진촬영 및 처리, 번역 및 통역, 포장, 전시 및 행사 대행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단, 법 제2조 제1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은 제외)

1.1.4 수리위탁 및 건설 위탁

(1) 수리위탁

① 개념

가. 「수리위탁」: 물품의 수리를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및 그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 수리하고 있는 경우,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유형

가. 물품의 수리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수리업자가 도급받은 자동차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 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수리하고 있는 사업자가, 수리행위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류나 설비기계에 부속되는 배선·배관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도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③ 유의사항

사업자가 「그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즉,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반복·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의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수리능력이 잠재적으로 있는 경우는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건설위탁

① 개념

가. 건설위탁이란(하도급법 제2조):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나. 대상: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있는 공종(자격 없는 부대공사 포함)을 자격 있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등

다. 제외: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건설업자·무등록·무면허업자, 시공참여 자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등

②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가드레일, 표지판, 엘리베이터)

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을 말한다(레미콘, 아스콘).

1.1.5 법적용 대상 사업자

(1) 개념

①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②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발주자가 된다.

(2) 수급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3항)

①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한다.

② 단,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의 경우 대금지급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로 인정한다.

[중소기업 해당여부]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평균 매출액 이하 여야 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인 기업이 최다 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 ※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3) 원사업자(하도급법 제2조 제2항)

-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중견기업 포함)
- ② 중소기업자중 직전 연간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제조 20억, 용역 10억이상)

가.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의 경우, 대규모중견기업(직전 연간매출액 2조원 초과) 과 소규모중견기업(업종별로 직전 연간매출액이 800억원~3,000억원 미만)으로 나뉘어진다.

나. 대규모중견기업과 소규모중견기업이 하도급 관계가 형성될 경우, 소규모 중견기업은 대금지급 관련규정에 한해서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는다.

다.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위탁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규정(60일 대금 지급)이 적용되어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는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대기업, 중견기업)	모든 중소기업
20억 이상 중소기업자(제조) 대규모 중견기업(2조 초과)	원사업자보다 직전 연간 매출액이 적은 기업, 소규모 중견기업 ※ 대금 지급 규정만 해당

※ [업무시 유의사항]

- “연간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위 하도급 조사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이므로, 대기업인지 혹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야 관리 및 대응이 용이하다.
- 해외기업의 한국법인이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다.
- 해외기업의 한국지사의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이 어떤 회사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국내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것인지, 수입품인지 여부의 확인)
-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제출하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타난 ‘업태’에 ‘도매, 소매’ 혹은 ‘대리점’으로 표기되어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표준품이나 기성품을 납품하는 업체라 해서 전부 하도급법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님. 즉,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요구하는 SPEC에 의해 제조, 납품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구분 되어야 한다.

1.1.6 법적용대상 기간

- (1)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신고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하다(하도급법 제23조).
- (2)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제조위탁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의미하며,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 의미하며, 건설위탁은 당해 공사가 완료된 날을 의미한다.
- (3)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1.2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1.2.1 개념

- (1)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
- (2) 하도급법 제 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 (3) 하도급법 제 13조의 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①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 (4) 하도급법 제 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3 발주자의 의무사항

1.3.1 개념

- (1)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법이지만, 발주자가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①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회 이상의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2.1 서면발급 및 서류의 보존 (하도급법 제 3조)

(1) 주요내용

서면발급은 하도급거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서면의 종류와 내용은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다.

단,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따라 발주시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발주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거래 기본 계약서에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발주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만 한다.

- ① 서면미발급의 정당한 이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 ② 서면발급 대상은 주된 하도급 계약뿐만 아니라 부속된 하도급계약도 포함된다. (예시: 사출관련 하도급거래에 부수된 소형 금형 제작)
- ③ 서면발급의 기준은 양사의 기명날인이 된 시점으로 한다.

가. 발주시점에 원사업자가 전자계약서를 송부한 후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내용의 제작 등을 개시한 이후 전자서명을 한 경우, 서면을 지연발급한 것으로 본다.

- ④ 원사업자는 정해진 거래조건이 이행되도록 발주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 구두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계약체결 또는 발주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와 언제까지 확정할 예정인지를 기재하고 발급할 수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긴급발주양식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가.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컴퓨터 등 전자적 형태의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

나.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은 위탁거래에 따라 목적물의 납품 또는 인도일을 말한다.

2.2 위탁시 기재사항

- (1) 위탁일과 위탁의 내용
-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3)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5)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6) 위탁 후 공급원가 변화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2.3 용역위탁시 서면내용시 주의 사항

2.3.1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의 기재

- (1) 제3조 서면에 기재하는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에게 위탁하는 행위가 수행된 결과,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되어야 할 물품 내 지 정보성과물의 품목, 종류, 규격, 사양 등, 또는 용역제공 위탁시에는 용역의 내용이다. 제3조 서면을 교부할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작성·제공할 위탁내용 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 (2) 또한 주로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에 관한 작성과정을 통하여 위탁한 정보성과물에 관해 수급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정보성과물을 제공시키는 동시에 작성의 목적이 된

사용의 범위를 넘어 당해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양도·허락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제3조 서면에 기재할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정보성과물을 제공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허락시키는 것(부분적으로 양도·허락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2.3.2 산정방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기재

(1) 제3조 서면에는 하도급대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기술자의 기술수준별로 작업시간에 따라 대금이 지급될 경우 등)에는 하도급대금으로 산정방법을 기재 하는 것이 인정된다. 단, 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야만 하며, 산정방법을 정한서면과 제3조 서면이 다른 경우에는 이 두 서면의 상호 관련성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 후 신속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 놓을 필요가 있다(산정근거가 되는 수치에 대하여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 제3조의 서면 형식으로 재 발행할 필요는 없음). 산정방법의 구체적인 기재의 예는 다음과 같다.

A 기술자의 시간당 단가○○○원 X 당해 기술자의 소요시간수
 +) B기술자의 시간당 단가○○○원 X 당해 기술자의 소요시간수
 +) 수급사업자가 작성에 총당한 실비(교통비, □□비, ▲▲비)

2.3.3 예외적인 서면의 교부방법

(1) 제 3 조 서면의 구체적인 필수 기재사항 중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당해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 게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단,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의 내용이 정하 여진 후 즉시 당해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2.3.4 당초 서면의 교부

(1) 제3조 서면의 구체적인 필수기재사항 중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당초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 및 그 내용이 정해질 예정기일을 당초서면에 기재하여야만 한다(※).

※ 당초 서면에 기재 할 「이유」에는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면 좋음. 예를 들면 「사용자의 상세한 사양이 미확정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 「예정기일」에는 내용을 정하게 되는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있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년○월○일」, 「발주 후 ○일」로 기재

(2) 「정당한 이유」란 거래의 성질상 위탁한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필요 기재사항 의 내용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3.5 보충서면의 교부

(1) 당초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 내용이 확정된 후에 즉시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보충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하기 전에는 교부하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서면에 대하여는 상호의 관련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① 당초 서면과 보충 서면이 동일한 주문번호를 사용한다거나, 보충서면상에 「본 문서는 ○년○월○일자 의 ○○문서의 보충서면임」으로 기재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당초서면의 내용을 보충하는 서면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으며, 서식·내용은 불문한다.

(2) 「가단가」에 의한 발주

① 하도급대금으로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를 기재하지 않고 당초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식단가가 아님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가단가를 기재한다거나 '○○원'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 및 정해질
 예정 기일을 당초서면에 기재하여야만 한다. 또한 가단가가 확정된 후에
 즉시 정식단가를 기재한 보충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3.6 서면 사전 교부 예외

- (1)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2)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 (3) 빈번한 거래의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4)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 전자적 형태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3.7 범위반 사항(Don'ts)

- (1)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발행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발행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 (2) 제조에 착수한 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함.
 (서면 지연 교부)
- (3)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양당사자간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4)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허위서면발급에 해당함.

2.3.8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하도급법제3조 제5항)

- (1)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제도이다.
- (2)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함 (회신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3)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이 추정 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2.3.9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절차

- (1)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포함)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2) 수급사업자의 서면통지 사항(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하도급대금·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일시·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3) 수급사업자의 통지 방법: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공인서명, 공인전자우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원사업자의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원사업자의 회신: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우편 포함. 단, 이메일은 제외)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회신하여야 한다.

2.4 주의 사항

- (1) 하도급법에서 인정하는 “서면”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상 6가지 법정기재사항이 있어야 하고, 실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2) “서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발급해야 한다.

- 즉,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 (3)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발급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 사업자가 공사 등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4)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 (5) 변경계약서와 변경내용 통지서는 다른 서면이므로 2가지 서면이 모두 발급되어야 한다.
 - (6)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 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서면 미발행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된다.
 - (7)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후 발주서 등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필수기재사항(검사기준 등)의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 (8) 월 1회 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대금을 월합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함

발급서면의 종류 리스트

단계	발급서면의 종류
<p>거래개시 (제3조)</p>	<p>①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납품일 및 장소 -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재료 제공시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p>② 하도급계약 확인서면(제3조 제6항,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p>

	-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두발주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사를 서면으로 회신
거래과정 (제8조-16조)	③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제8조) ④ 검사결과 통지서(제9조) ⑤ 감액서면: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물량, 금액, 감액방법 등(제11조) ⑥ 기술자료 요구서: 기술자료 요구시 명칭 및 범위, 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 대가 등(제12조의3) ⑦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제16조) • 보존 대상 서면: 14개 유형 -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서면 7개과 중요 하도급거래 내용을 기재한 서류 7개

서면 보존 대상 리스트

연번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4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5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6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9	<p>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p>	<p>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p>
10	<p>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p>	<p>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p>
11	<p>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p>	<p>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p>
12	<p>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p>	<p>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p>
13	<p>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p>	<p>하도급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p>
14	<p>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p>	<p>하도급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p>

2.5 관련 사례

<삼성중공업의 서면 지연발급 건> (2020년 4월 24일 보도자료)
<p>[사실관계]</p> <p>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p> <p>계약 서면 38,451건 가운데 전자 서명을 완료하기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6,646 건, 공사 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늦게 발급한 건을 없애고 다시 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다.</p> <p>삼성중공업은 계약 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 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 한 날짜로 설정했다.</p> <p>또한 계약서 작성 시점에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 시작일이 계약서 작성 시점 이후가 되도록 설정했다.</p>
<p>[공정위 판단]</p> <p>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적고 당사자 간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일은 전자 서명 완료일이 되어야 하므로 삼성중공업은 System 상으로만 사 전발급의 형태일 뿐 실제로는 지연발급한 것이다.</p>

2.6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하도급법 제 9조)

2.6.1 주요내용

- (1)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지적성과물과 관련된 용역의 경우 목적물을 수령일은 검사를 요청받은 날을 의미한다.(IT Project 등은 검수요청일을 적용)
 - ②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합격/불합격의 결과만 통지하는 것은 불완선서면교부 등에 해당할 수 있다.
- (2)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 (3)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4) 불량원인이 불분명하여 재검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불량 책임이 있는 측에서 재검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5) 제조업의 경우 대량 납품시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를 적용하는 방식이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검사 후 인수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2.6.2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에 대한 세부사항

(1) 검사의 방법

- ① 검사의 방법으로는 사전에 상호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하며 전수검사, 발체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있다.

(2) 검사결과 통지기간(10일)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10일을 넘어서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가.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 검사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정당하지 않은 사유

가.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의 납기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3) 재검 등으로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차 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 재검 실시 등)을 통지하고 재검을 진행하여야 함.

(4) 검사의 방법으로는 사전에 상호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하며 전수검사, 발체검사, 제 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있다.

(5) ERP 등의 System을 통하여 검사요청이 들어온 경우 System을 통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런 경우는 서면으로 발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IT 용역 등의 경우 검사요청 후 10일 이내에 합격여부(반려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합격, 불합격 처리 없이 미흡사항의 보완요청 후 최종완료시 합격처리하는 경우는 검사기간 미준수에 해당할 수 있다.

2.6.3 업무상 유의사항

- (1)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란 발주한 제품이 공장 등에 도착한 날을 의미한다.
단, 지적 성과물 등에 대한 용역위탁의 경우 검수요청일을 의미한다.
- (2) 서면 통지가 원칙이므로 구두통지는 법 위반이다.
- (3) 검사 기준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품할 수 없다.
- (4) 계약서에 별도로 합의한다 등으로 기재한 경우 합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 (5) 품질검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변경이 불가능하며, 상호합의하에 변경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어야만 한다.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감액등에 해당할 수 있음)
- (6) 특약 등이 계약서 내용과 상반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6.4 관련 사례

<p><검사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서면을 미발급한 건> (그린조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건, 2014부사1642)</p>
<p>[사실관계]</p> <p>피심인은 2010. 8. 18.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서를 발급하여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일, 목적물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였다.</p>
<p>[공정위 판단]</p> <p>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용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목적물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위반에 해당한다.</p>

<검사 결과 서면 미통지>

(대진전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건, 2012서제0967)

[사실관계]

검사결과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검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을 말한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 사안에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정한 사실이 없고,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7 하도급대금 지급의 의무 (하도급법 제 13조)

2.7.1 주요내용

- (1)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2) 물품 등의 검사 기간 등에 불구하고 납품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이 된다.
- (3) 민사상의 분쟁 등이 발생하거나, 재검 등으로 검사결과가 확인이 늦어지거나, 협력 사의 잘못 등으로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행위 등은 모두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해당 한다.
- (4) 거래가 빈번하고 사전에 합의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다.

2.7.2 지연이자 및 수수료

- (1)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 (2) 60일(준공금, 기성금은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현재 연 15.5%)를 적용한다.
- (3) 어음의 경우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어음할인 수수료(연 7.5%)를 지급해야 한다.
- (4)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담보부대출 등)상환기일이 60일 초과시 수수료(은행과 적용하는 약정할인률)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적용 방식

•목적물 수령일: XX년 3월 31일

① Case 1

- 4월 20일 외담대 지급 (만기일 6월 30일)
-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발생 (정상지급)

② Case 2

- 4월 20일 외담대 지급 (만기일 7월 20일)
- 지연이자 미발생 (지급일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20일임)
- 지연수수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발생 (20일분, 7월 1일 ~ 20일)

③ Case 3

- 7월 10일 외담대 지급 (만기일 7월 31일)
- 지연이자 발생 (7월 1일~ 10일)
- > 지연대금 X 15.5% X 10일/365 (지연이자는 공정위 고시 기준)
- 지연수수료 발생 (7월 11일 ~31일)
- > 지연대금 x 은행약정 할인률 x 21일/365일

④ Case 4

- 7월 10일 현금지급
- 지연이자 발생 (7월 1일 ~ 10일)
- > 지연대금 X 15.5% X 10일/365 (지연이자는 공정위 고시 기준)

2.7.3 범위반 유형(Don'ts)

- (1)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 (2)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매입일을 목적물로 수령일로 하여 60일째 날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7.4 업무시 유의사항

- (1)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한편,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된다.
- (3)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게 된다.
- (4)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된다.
- (5)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2.7.5 관련사례

<p><브이엘엔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p> <p>(2014서제2792, 의결 제2015-176호)</p>
<p>[사실관계]</p> <p>브이엘엔코는 2013.10.7. ~ 2014.2.6.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8종의 골프의류(스커트, 바 지) 총 123,400개를 제조위탁하였는 바, 수급사업자로부터 골프의류 8종을 2014.1.31. ~ 2014.3.31. 까지 총 121,894개를 납품받았고, 해당 하도급대금 2,273,451천원을 2014.2.20. 부터 2014.4.18.까지 총 3회에 걸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불량제품을 마치 정상제품인 것처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2014.4.18. 지급한 총 1,076,284천원의</p>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2014.6.17. 취소한다고 통보한 후 만기일인 2014.6.30.에 이를 결제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브이엘엔코는 수급사업자가 검사업체를 회유하여 하자 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가 납품 한 제품의 판매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브이엘엔코가 납품 받은 제품들은 자신이 지정한 검사업체의 품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한 제품인 점과 검사업체로부터 합격 받은 제품을 납품 받고 나서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취소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 점에 비추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 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8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무 (하도급법 제 16조)

2.8.1 주요내용

(1)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줄 의무가 발생한다

- ① 제조·수리 또는 용역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데,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한다. 이 경우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3조의 지연 이자 및 어음할인료 규정 적용된다. 즉,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이 15일 초과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2.8.2 조정기준

- (1)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 확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2) 즉, 개별품목별로 조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세부공사 내역에 따라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3)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 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하다.
- (4)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 데 있어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조정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 (6)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 액해 주어야 한다.

2.8.3 조정기일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2.8.4 업무시 유의사항

- (1)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 (3)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단, 선발주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 (4)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기지급된 선급금은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 가능하다.
- (5)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공종의 경우에도 증액해주어야 한다. 단, 발주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해 조정한 경우는 그 비율대로 조정해야 한다.
- (6)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 (7)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금액을 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 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계약체결 60일 이내, 물가변동 조정율이 5% 미만인 경우 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는 경우 위법이다.
- (8)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 가능하다.
- (9)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계약금액 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총액 조정방법이 일반적이다.
- (10)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고 원사업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을 적용받았다면 물가 조정에 따른 대금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의 작업분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 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률을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11) 다만,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정률은 원사업자가 적용 받은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입증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8.5 관련 사례

<롯데정보통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3건하1013)>
<p>[사실관계]</p> <p>롯데정보통신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광주 수완쇼핑몰 증 약전공사’ 등 10건의 건설공사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한 동 건설공사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p>
<p>[공정위 판단]</p> <p>롯데정보통신은 발주자로부터 물량증가·감소의 사유로 금액조정을 받았으므로 15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음에도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사에게 단기 11일부터 장기 285일까지 지연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하였는 바,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p>

2.9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하도급법 제 16조의 2)

2.9.1 주요내용

- (1)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를 대신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재료비, 노무비 등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 (3)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또는 협의 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9.2 범위반 유형(Don'ts)

- (1)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2)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2.9.3 업무상 유의사항

- (1) 조정협약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범위반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2) 조정요청 공문을 접수한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관련내용에 대한 회의록 등을 작성, 상호 기명날인(혹은 서명)등을 하여 유지한다.
- (3) 협의시 가격결정 권한이 있는 실무자 혹은 팀장급이 참석하여야 한다.

2.10 선급금 지급의 의무(하도급법 제 6조)

2.10.1 주요내용

- (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 대상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 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2)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7.5%) 또는 수수료(금융기관과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 율에 의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2.10.2 범위반 유형(Don'ts)

(1)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경우

(2)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40% 수령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는 25%만 지급한 경우

2.10.3 업무시 유의사항

(1)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지급한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월1회 기성정산 후 60일 이내 지급과 동조 제3항의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중 어느 조항으로 적용 또는 우선하는지에 대하여는 제 13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의 보완조항으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제1항의 대금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할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한 것이다.

- (3)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급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였는지, 지급 시기는 적정한지, 선급금을 어음이나 대 체결제수단으로 지급 시 수수료는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한다.

2.10.4 관련사례

<케이에이치피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5부사2592, 제2016-123호)
<p>[사실관계]</p> <p>케이에이치피티는 2012.6.14. 및 2013.9.4.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을 자신이 선급금을 받은 날 또는 제조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2.6. ~ 2014.3.24.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p>
<p>[공정위 판단]</p> <p>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자신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케이에이치피티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경우 선급금 일부가 각 기성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p>

2.11 관세 등 환급금 지급의 의무 (하도급법 제 15조)

- (1)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2) 다만, 위 기간(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한편,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2.12 내국신용장 개설의 의무 (하도급법 제 7조)

- (1) 수출물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하여야 함.
- (2)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인수증) 교부
- (3)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①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 ②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 (4) 정당한 사유 존재 시 예외
- ① 수급사업자가 개설을 원하지 않은 경우
 - ②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등으로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 (5) 내국신용장을 월 1회 이상 일괄 개설하기로 합의한 날에 개설하더라도 적법함
- (6) 위반유형 : L/C 미개설, 지연개설행위

3.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3.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 4조)

3.1.1 주요내용

- (1) 기본 개념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기준은
- ① 발주한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급부의 내용에 비하여 통상 지불하는

대가에 비해 낮은 금액을 부당하게 정하는 경우이다.

- (2) 단순히 정상가격보다 낮게 결정에 되었다고 부당한 대금결정에 해당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였더라도 정상가격보다 높게 가격이 결정되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는 이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낮은 대금으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해하고 경영을 압박하게 되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을 규제하고 있다.

- (4)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동일한 거래의 급부의 내용에 대해 당해 수급사업자가 속한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대가(통상대가)를 말한다. 통상대가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예를 들면 당해 급부가 종전의 급부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종전의 급부에 관한 대가로 계산된 대가를 통상 지불하는 대가로 취급한다.

※ 법 제4조 제1항의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은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① “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단은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②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된 대가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되는 대가를 적용한다

(2)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유형

- ① 목적물 등과 같은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② 목적물 등과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③ 종전에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 출한 대가

- ④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최저 수준)
- ⑤ 신규 개발품과 같이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제조 등의 원가에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
- ⑥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된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 ⑦ “낮은 수준”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결정된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차액규모, 목적물 등의 수량과 해당 시장 및 전·후방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⑧ 원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의 여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8두14296 판결).
- ⑨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에 이미 발주한 수량과 상관없는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 ⑩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3.1.2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하게 판단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 즉,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용도, 공법, 대금결 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1.3 범위반 유형 (Don'ts)

[공정위 심사지침의 유형별 예시]

유형	예시	특이사항
‘부당하게’	21	단가, 수량 지연확정, 임시단가를 사용한 인하, 허위정보의 사용, 추가비용 미보전 등
일률적 단가인하	7	원자재가격 인하 등 사유는 타당하나 가공비항목에서 일률적으로 인하 시 위반
일정금액 할당	3	
차별적 취급	1	지정한 운송업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불허
거래조건 착오	4	마치 발주량을 대폭 늘려 줄 것 처럼 언질...
일방적인 단가결정	6	위탁 후 단가 결정시 제조원가 초과는 위법
경쟁입찰시최저가 이하 단가 결정	3	예정가 초과시 재입찰 미고지시 위법
부당한 부담 전가	3	

(1) 납품시점에 대금/수량을 미확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방식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에 대한 단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납품 받을 때 단가를 정하는 경우
- ③ 원사업자가 수량과 단가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 합의서 작성 시 수량을 제외하고 단가만 명시(단가 합의서 작성)하여 수량을 미확정 상태로 두고 매 발주시마다 수량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2) 임시가격 등을 가격인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① 원사업자가 단가결정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예상수량으로 단가를 정하고 추후 수량을 확정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량증감에 따른 단가조정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의 산출이 가능할 때(예컨대, 제1회차 납품 후)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회차 목적물이 납품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 ③ 신규 개발품이 아님에도 원사업자가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로 발주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임시단가로 위탁한 후 발주자가 가격을 인하할 경우 그만큼을 인하하여 단가를 확정하는 경우

(3)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격을 낮추는 행위

- ① 원사업자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생산량감축 계획 관련 문건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중단이나 물량감축 의사를 내비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자율적 의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낮은 견적가를 받기 위해 발주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결제 수단·운송·반품 등의 거래 조건, 민원처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관련 기술자료 (설계도서, 시방서, 특수한 공정·공법 등과 이에 대한 견적가 산출내역 등)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제출한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4) 가격 결정 후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지 않은 경우

-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업무량을 일방적으로 추가시키고 하도급대금은 증액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 및 시행령에 의거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포함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 받은 후 하도급계약 금액을 하도급관리계획상의 하도급계약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신규항목 등에 대한 물량 및 단가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작성한 변경 내역서를 제시하며, 변경 계약에 서명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압박하여 신규항목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5) 기타 비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 방식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거래관련 (인감)도장을 맡아 보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를 하도급대금 결정에 합의한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원사업자가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그 실행예산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③ 원사업자가 가격책정 모델 또는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격인상 근거 자료로는 활용하지 아니하고 가격인하 근거로만 활용하는 경우
- ④ 원사업자가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처 변경 시 가.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격인하에 불응할 경우

나. 거래처 변경 가능성을 내세워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계약 갱신 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 ⑥ 해당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면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보전해 주기로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⑦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선물용, 견본용 등을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나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⑧ 원사업자가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낙찰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 거래 시 물량감축 등의 불이익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협력사 관리내규를 이용하여 지명경쟁 입찰가격을 낮게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

(6) 일률적인 비율의 인하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 ① 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②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률 씩(예컨대, 100억 이상인 수급사업자들에게 7%씩, 50억~100억인 수급사업자들에게 5%씩, 50억 이하인 수급사업자들에게 3%씩) 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 정률씩(예컨대, 10만원 이상 품목은 5%씩, 10만원 미만 품목은 3%씩)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④ 완성차 제조 원사업자가 신규로 다수의 부품제조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 사업자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위탁품목별로 일정률씩 (예컨대, 엔진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10%씩, 타이어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5%씩, 브레이크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3%씩) 단가를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가격이 A는 250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200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 ⑥ 환율변동 및 원자재가격 인하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사유와 무관한 가공비 항목에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⑦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과업과 관련 없는 과업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7)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

"일방적으로"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 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복수의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시한 경우 이들의 평균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 등의 수량, 해당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동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할당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 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여 위탁한 후 단가를 확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 없이 원사업자 일방의 의사결정을 통해 임시단가 그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물의 최초 납품 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으나 이후 해당 합의를 무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가 객관적·합리적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 원사업자 일방의 영업수지 개선계획에 따라 협조요청 등을 명분으로 한 통보나 강요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⑥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 또는 복리후생 비용 등의 인상, 임직 원수의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 등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등의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원 사업자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 단가인하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동결, 인원감원, 영업이익률 등이 하락하거나 원자재가격의 인상 등으로 영업수지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서 원사업자가 관례적으로 다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8)거래조건의 착오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법 위반 행위]

- ① 원사업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생산량 증대계획 또는 신규 수주계획 문건 등을 수급사업 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종전계약보다 발주량을 대폭 늘려줄 것처럼, 또는 그와 같이 수주가 이루어 질 것처럼 언질을 주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후 실제로는 발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
- ② 다른 사업자의 견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해당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 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지급조건인 것처럼 내비춰 단가를 낮게 책정한 후 실제로는 만기 6개월의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법 제4조 제2항 제7호(최저가 입찰에서 가격 인하)에서의 정당한 이유의 예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의 예시>

- ①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한 경우
- ②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미리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계약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
- ③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9) 주의사항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여도,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정가격은 단지 원사업자 자신의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한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1.4 업무상 주의 사항

- (1) 입찰이 아니면 입찰이란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됨. 최종 견적서를 첨부할 것. (일방적인 결정 후 통보로 오해될 수 있음)
- (2) E-mail 등의 당사의 예산이 XX임,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오해될 수 있음.
- (3) 하도급업체의 영업이익률 등을 관리(?)하여서는 안 됨.
 - ① 해당 하도급업체가 당사와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무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익률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은 불가능함.
- (4) 당사의 원가절감 계획은 특정업체, 특정제품을 지정하고 인하 단가를 제시하여 작성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어야만 함.
 - ① 해당 제품의 시장가격은 XX이므로 XX로 조정한다 등의 기준이 있어야만 함. (Bidding을 통한 단가 인하, 생산안정화 및 물량 증가로 공수감소 반영 등은 인정되지 않음)

3.1.5 관련사례

<p><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례> (2020년)</p>
<p>[사실관계]</p> <p>대우조선해양은 시수 계약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정 추가 공사는 객관적인 시수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공종별 표준원단위(품셈표)*를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수를 일방적으로 조정하여 대금을 결정하였다.</p>

- 시수(時數, MAN-HOUR) :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수량에 일정한 산식(품셈, 원단위*)을 곱하여 정해짐.

* 원단위(품셈): 한단위 수량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준 시간

- 시수계약 : 하도급대금 = "시수(時數)"(변수) × "임률단가"(상수)

예) 임률단가를 10,000원으로 가정하면, 어떤 작업 물량이 '10시수'일 때

하도급대금은 100,000원이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객관적 근거없이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회사의 예산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기성을 지급하였으며 하도급 업체로서는 수정/추가 작업의 대가로 받는 기성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공사 대금을 매월 일괄 정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하도급 업체로서는 계약서 없이 기성 시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것의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실제 작업량과 무관하게 기성이 정해진다는 사실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알려지면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기며 합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였으며 수정·추가 작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스스로 진단했다.

[공정위 판단]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 따라 기성 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일 방적으로 정해서 지급한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은 하도급 업체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 또는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

<일률적 단가 인하 사례> (포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4부사0457)

[사실관계]

포스텍은 2012년 4월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 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이와 관련된 5개 수급 사업자는 그 작업의 내용, 거래 규모, 기존 작업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주)포스텍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또한 (주)포스텍은 2011년 1월경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요청을 받아,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만 원을 회수했다.

[공정위 판단]

이러한 행위는 포스텍과 발주자 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이다.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와 부당감액 행위에 1억 3,500만 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3,900만원)을 부과하였다.

<삼성중공업의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2020)

[사실관계]

-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삼성중공업의 생산 부서에서 실제 투입공수(실제 투입 노동 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공수를 산정하여 원인 부서·예산 부서의 검토를 요청했다.
- 생산 부서는 비물량성 공사일 때, 능률* 등을 반영하여 실제 투입 공수보다 낮게 수정, 추가 공수를 산정했다.

또한 원인 부서·예산 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합리적·객관적인

<p>근거없이 추가로 삭감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러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끝난 후 삼성중공업이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 실제 투입 공수 대비 인정 공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삼성중공업은 50% 내외의 능률을 적용함
<p>[공정위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중공업은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공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수 계약의 하도급 대금은 '공수' 와 '직종 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삼성중공업의 공수 삭감 과정에서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 수준보 다도 낮게 결정되었다.

3.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 5조)

3.2.1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2.2 범위반 유형(Don'ts)

- (1)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
- (2) 구매·외주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3.2.3 업무상 유의사항

- (1)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 언급 없다가 제조위탁 후 발주자가 지정한 제조자재라는 이유로 고가 자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의 요구이므로 물품구매강제는 아니나, 계약 당시 해당 자재의 사용에 대한 언급이

자재사용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한 하도급대금이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차액보전 및 증액이 필요하다.

- (2) 거래시 거래사유 및 거래대금은 적정한지 확인한다.
- (3) 거래 과정에서의 하도급 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구매를 강제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 (4) 물품 등을 구매, 사용토록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3.3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하도급법 제 8조)

3.3.1 주요내용

- (1)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 임의 취소, 변경이 금지된다.
 - ① 위탁 임의 취소/변경 금지
 - ② 수령/인수 거부 또는 거부 금지. 단,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위탁의 취소”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의 위탁을 한 후 임의로 용역위탁을 취소(해제·해지를 포함)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해제·해지를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3.3.2 판단기준

- (1)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없이 일 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위탁취소의 사유가 해당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위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때 실질적인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만약 원 사업자의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된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협의를 없었던 것으로 봄.

③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

(2)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취소나 수령거부행위가 부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 제조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용역의 착수를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이하 “납기”라 한다)에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하게 발주취소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임을 주의해야 한다.

3.3.3 법위반 유형(Don'ts)

- (1) 선행단계가 지연되어 수급사업자가 작업해야 할 후속단계가 지연되는 경우
- (2) 무리하게 일정을 일방적으로 단축한 후 일정지연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 (3) 원사업자의 사정(판매부진, 공간부족, 경영상황악화 등)을 이유로 위탁취소 등을 하는 경우

- (4)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위탁취소 등을 하는 경우
- (5)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6)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7) 위탁 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8)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9) 원사업자가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이유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
- (10)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12)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13)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3.4 업무시 유의사항

- (1)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경우 수령의무 없다.
- (2) 수급사업자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선고 신청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하다.

- (3) 공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하다.
- (4) 공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를 상당 동안 지연하는 등으로 기간 내에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하다.
- (5) 발주 후 임의로 이를 취소 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없는지 확인한다.

3.3.5 관련 사례

<p><납기 이후 위탁취소 사례>(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2제하0213)</p>
<p>[사실관계]</p> <p>삼성전자는 147개 공급사업자들에게 발주한 건에 대하여 납기일이 지난시점에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을 통해 생산물량 감소, 생산일정 변경, 자재 단종, 설계 변경, 과잉 발주 등의 이유 를 들면서 공급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하고자 하는 위탁취소에 대해 허용(Accept)할 것인지 불허(Reject)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사업자가 불허(Reject)를 선택하면 해당 발 주 건에 대해서 입고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연수령이 되었고, 동 전산시스템상으로 이러한 선택을 요구받은 공급사업자가 전산시스템상에 표시된 허용(Accept)표시 부분을 클릭함에 따 라 동 전산시스템상의 발주항목에서 해당 공급사업자의 발주정보가 동시에 삭제되게 함으로 써 위탁을 취소하였다.</p>
<p>[공정위 판단]</p> <p>이러한 발주취소는 삼성전자 측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이루어졌 으므로 공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위탁취소에 해당하며, 납기일 종료 후에 위탁취소를 하는 경 우, 공급사업자는 이미 제품생산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재고부담, 미납품 자재처리, 이자부담 등 직접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에 따른 손 실 등 간접적인 피해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급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납기일 종료 후 에 제조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취소하는 것으로 위법이며, 전산시스템 으로 동의를 이루어졌을지라도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동의한 것에 대해 이를 형식적인 동의 로 판단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이에</p>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목적물 지연 수령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06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사례> (그린조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 2014부사1642)

[사실관계]

그린조이는

① 2010.8.18.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서를 발급하여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 하면서 위탁일, 목적물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만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 하였다.

② 2013.9.27. ~ 2013.11.15. 기간 동안 2014년도 봄과 여름에 판매할 남성 및 여성용 골프 복 제조를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10종의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하였는 바,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제품의 생산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납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발주 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2013.12.10. 수급사업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공정위 판단]

그린조이는 수급사업자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제품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과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납기가 충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린조이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탁취소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4 부당 반품의 금지 (하도급법 제 10조)

3.4.1 주요내용

- (1) “부당반품”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한다.
-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부당반품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분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4)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5) 부당반품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3.4.2 법위반 유형(Don'ts)

-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해 경제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3)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4)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5)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납기지연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 (6)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3.4.3 업무상 유의사항

- (1) 당사자간에 하도급계약 체결시 검사방식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시킨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2) 다만, 반품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반품원인을 규명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 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불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정당한 이유가 있어 반품하는 경우에도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범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3.4.4 관련 사례

<과다발주를 이유로 반품한 사례>(인탑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09하개1116)
<p>[사실관계]</p> <p>인탑스는 사출물을 두 차례 납품 받은 후, 납품 받은 날부터 2~6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요량 보다 과다하게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였다. 인탑스 직원의 실수로 인한 과잉발주가 있었 으며 이로 인해 반품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과잉 발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출물을 납품 받은 후 검사결과를 통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출물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반품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p>
<p>[공정위 판단]</p> <p>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고 그 만큼을 감액한 하도급대 금 합계 1,844,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감액한 날(2008. 12. 30.)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 지의 지연이자(연리 25%의 이율 적용)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p>

3.5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 11조)

3.5.1 주요내용

- (1)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행위는 금지된다.
- (2) “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위탁을 할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시점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빈번하여 계약기간·대금결제·운송·검 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 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 (4) 계속적 거래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에 이미 발주한 수량에 대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한편,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된 후 수량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3.5.2 판단기준

- (1)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위반으로 판단한다. 즉, 감액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범위반 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감액의 “정당성”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의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원사업자는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 ① 감액의 사유와 기준
- ②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③ 감액금액
- ④ 공제 등 감액방법
- ⑤ 기타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3.5.3 범위반 유형(Don'ts).

(1) 원사업자가 불경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목적물 등에 대한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광고·경품 등의 마케팅비용의 지출을 늘린 후 그 비용의 일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2)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

(3) 장기·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가 자신의 검수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불량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되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제조공정에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 등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 지급함을 이유로 부당하게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감액하는 행위

- (7)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8)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규격과 재질, 성능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완제품 조립용 부품을 원사업자의 검수를 거쳐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포장지의 오·훼손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9)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10)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11)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12)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 혹은 발주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13)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14) 원사업자의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 (15) 하도급계약 후 추가작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당초의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3.5.4 업무시 유의사항

- (1)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 확정되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한 경우는 가능하다.
- (2) 하도급계약서상의 작업내역과 실제 작업한 내역에 차이가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정산에 합의하여 감액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3)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대금, 가불금, 장비임차료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한 경우는 가능하다.
-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 물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결제통화를 외화표시로 할 것을 합의하고 환율변화에 따른 차액을 감액한 경우는 가능하다.
- (5) 단가의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 부터 일정비율 및 일정액을 감액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감액은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을 사후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생기는 위반행위이므로 감액에 해당될 수 있다.
- (6) 수급사업자 사이에 단가인하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여 단가개정이 되었어도 이 합의 전에 이미 발주된 것에 대해서까지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구단가로부터 신단가 로 인하하는 때에는 신단가는 단가개정이 합의된 후의 발주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
- (7) 이미 발주한 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감액이 된다.
- (8) 소비세, 지방소비세액 상당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감액에 해당될 수 있다.
- (9)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
- (10) 회신이 없으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일방적 통보는 합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11) 감액하는 항목 및 품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XX 외 20개 등”이나 “총액 00원”으로만 기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12) 반품가능기간 (입고 후 10일)이 경과한 이후 반품하는 것은 부당한 감액이 된다.

3.5.5 관련 사례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0부사2816)
<p>[사실관계]</p> <p>세진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도장작업을 제조위탁한 후, 2010. 3. 8.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면서 합의 성립일 이전인 2010. 1. 2~3. 7. 까지 제조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여 기존 단가에서 10% 인하된 단가로 감액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3월 하도급대금에서 88,430천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p>
<p>[공정위 판단]</p> <p>단가인하 합의 후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 관련 합의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단가인하 적용기간의 장기간 소급적용을 인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열악한 수급사업자로서는 지속적인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단가인하에 의한 직접적인 이익이 박탈되는 등 하도급법 목적에 반함.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적용하여 감액한 하도급대금 88,430천원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34,000천원)을 부과하였다.</p>
<현대위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건> (제2017-223호 2017. 6. 28)
<p>[사실관계]</p> <p>2013. 9. 1.부터 2016. 6. 30.까지 자신이 납품한 자동차부품의 하자로 클레임이 제기됨에 따라, ○○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총 2,692건에 해당하는</p>

<p>66,734,470원의 클레임 비용 변제를 요구 받았다.</p> <p>이와 관련하여 총 2,692건 중 2,309건의 클레임의 경우 피심인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강 등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클레임 비용 34,311,239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다.</p>
<p>[공정위 판단]</p> <p>피심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2,309건에 대한 클레임 비용 34,311,239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여 자신이 부담할 비용을 해당 수급사업 자에게 전가시켰는 바,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인이 불분명 하여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p>

3.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하도급법 제 12조)

3.6.1 주요내용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6.2 범위반 유형(Don'ts)

- (1)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
- (2)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3.7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 12조의 2)

3.7.1 주요 내용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한 거래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요구 등은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할 수 있다.

3.7.2 범위반 예시

(1)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외에 추가로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행위

①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실 납품 수량 대비 5%를 손실(Loss)분 으로 무상입고 하도록 한 행위

②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및 위탁상품에 대한 판매촉진행사비용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3.7.3 업무상 유의사항

(1) 계약된 목적물 외의 물건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경제상 이익 강요에 해당함 (박스, Pallet 등을 요구하는 것도 해당됨)

(2) 품질 Loss가 발생한 건에 대한 손실보충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전에 정량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3) 품질 불량 등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음.

3.8 기술자료제공 요구 등 금지 (하도급법 제 12조의 2)

3.8.1 주요내용

(1) 개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①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실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
- ② 수의계약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 ③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입찰과정에서 참가자로부터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 ④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⑤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⑥ 원사업자가 기존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경쟁입찰 과정에서 제안서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⑦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기술자료 제공요구 세부행위 및 위법성 판단기준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대상행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 파일(File) 등의 형태일 경우 접속·열람 허용 등을 포함], 기술지도, 품질 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위법성 판단기준

-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는다.
- 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차적,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공정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다. 원사업자가 신제품 등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허가나 신고 대상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포함된 경우
- 라. 원사업자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적용 여부, 거래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부품 승인에 필요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③ 원사업자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
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의한
교부 조건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
출원을 위하여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 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⑥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받은 후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⑦ 수의계약 시 또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통한 위탁계약 시 아직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주문품의 기준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개략적인
원가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⑧ 원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을 전수·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동 전수·지도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⑨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a. 정당한 기술 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의 공정위 예시는 아래와 같다.

- a-1. 원사업자가 관계기관에 허가나 신고를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허가나 신고대상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 a-2. 다른 부속품과의 결합을 위해서는 외형 도면 및 수치만 필요함에도 원사업자가 제품의 내부 구조에 대한 상세 도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 a-3. 원사업자가 부품 승인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부품 승인에 불필요한 상세 기술자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3.8.2 기술자료의 범위 (공정위 예시 기준)

(1)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제품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2)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정보·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 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예시 1> 현재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예시 2>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예시 3> 실패한 연구 데이터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
(소극적 정보 : negative information)

<예시 4>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 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어떤 지식재산권의 내용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발명, 고안, 창작하는 전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참고된 것으로서 그 지식 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된다.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수급 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는 당해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하는데 필요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시>

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운용 매뉴얼, 혼합 또는 배합 요령,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3.8.3 법위반 유형(Don'ts)

- (1)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 하는 행위

- (2)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 (3) 사전에 합의한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 (4)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 (5) 기술자료를 요청하면서 법정사항을 포함한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은 행위

3.8.4 업무상 유의사항

- (1)협력사 자료요청 System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함.
 - ① 서면 미발급 위험을 예방
- (2)협력사의 노력이나 Know-How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술자료로 간주
 - ① 기술적 가치의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음.
- (3)공동개발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합의절차가 있어야 함.
 - ① 협력사는 기술자료 고지의무가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4)품질개선대책서, 물성 Test 결과 등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항목들도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3.8.5 관련사례

<기술자료 유용- 현대건설기계(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8제하0053)

[사실관계]

현대건설기계는 2017. 11. 13. 수급사업자 ○○ 및 ○○○○에게 <표 3> 기재와 같이 21톤 굴삭기에 적용되는 하네스 3개 품목의 제작도면을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전자우편으로 요구하여 2017. 11. 13.과 2017. 11. 14.에 각각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현대건설기계는 납품업체를 이원화하여 하네스 품목의 원가를 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 개발 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기존 수급사업자인 ○○, ○○○○ 등의 기술자료인 제작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경쟁사업자에게 견적가격을 제 출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용 하네스 제조업체인 △△전선에게 건설장비용 하네스의 납품가능 성을 알아보고자 접촉하면서 2017. 10. 31.부터 2018.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기존에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인 ○○, ○○○○, ○○○ 전장의 하네스 제작도면을 거래교섭 중인 △△전 선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힐로더 신규 모델에 적용할 드라이브 샤프트 개발을 위하여 시제품 개발 입찰을 진행하면서 피심인과 기존에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인 ○○정공의 제작도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

[공정위 판단]

해당자료는 납품 품목의 외형 및 수치, Note(제작 방법 및 제조 시 유의 사항), 해당 품목을 구성하는 세부 부품 선정목록, 세부 부품의 수량·소재·도면, 각 세부 부품 간의 결합위치, 해당 품목의 완성도 평가 등을 위한 시험방법 및 기준 등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정 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 어 있는 제조물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자료로 인정되며 현대건설기계측 이 주장한 기술자료 의 공동소유 및 현대건설기계가 제공한 Spec을 단순 작도한 도면이며 현대건설기계는 회로 도 등의 더 가치있는 도면이 있으므로 기술자료의 유용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은 하도급법 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도 사전에 권리귀속 관계를 명확히 협 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사업자가 임의로 공동권리를 주장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도면은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노하우로 도면화되었으므로 더 상세한 도면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므로 서면미발급 및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함

<기술자료 유용- (주)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서제3811)

[사실관계]

(주)한화는 신고인과 공동개발방식으로 스크린 프린터설비를 개발하던 중 자체개발로

변경하고 신고인이 제공한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장비를 개발하였다.

(주)한화는 신고인이 제공한 장비의 매뉴얼 본문 자료 중 장비 명, 기재 문구, 장비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내부 자료 등에도 “자체 개발 스크린 프린터의 기본 구조는 현재 아산 공장에 있는 SCM-14D 장비와 동일하게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해당 자료를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장비의 제원, 구현방식 등도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현대건설기계는 신고인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신의 스크린프린터 개발에 참고 또는 응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공정위 판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스스로 ‘사용’한 경우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생산 및 판매 등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여 필요한 과정을 단축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하는 경우 등 간접적인 사용행위까지 포함하므로 해당 행위는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한다.

3.9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하도급법 제 17조)

3.9.1 주요내용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3.9.2 업무시 유의사항

기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있었으나(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벌 등), 하도급거래 현실에 비추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권유 및 가용에 의하여 자신의 내심과 달리 대물변제에 동의한다는 가장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 되었다. 개정사항은 대물변제를 금지하되, 단서에서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대물변제의 소지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0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하도급법 제 18조)

3.10.1 주요내용

- (1)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공정위가 고시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10.2 공정위에서 고시한 요구가 금지된 경영상 정보

- (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 부지급 내역 등)
- (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 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3.10.3 범위반 유형(Don'ts)

- (1)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2)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3)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4) 하도급거래량 조정, 수급사업자 임직원 선임 등
- (5)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6)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7) 공정위가 고시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음.

3.10.4 업무시 유의사항

- (1)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영간섭이 필요하다는 점, 즉 부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 (2)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장 등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경영간섭에 해당 한다. (품질 Audit 등을 이유로 불시 출입하면 안됨)
- (3) 산재보험료 산출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4) 하도급업체의 근무시간이나 인력투입수준 등을 통제하거나, 지시하여서는 안된다.
- (5) 견적요청 과정에서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하지 않는다.
- (6) 견적을 요청하면서 경쟁력 있는 견적가,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는다.

3.11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법 제 19조)

3.11.1 주요내용

- (1)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또는 분쟁 조정신청)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①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
 - ②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 신청

3.11.2 범위반 유형(Don'ts)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신고한 수급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력사에서 배제시키거나, 협력사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 위(보복조치에 해당)

3.12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법 제 20조)

3.12.1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는 금지된다.

3.12.2 범위반 유형(Don'ts)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2)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3.12.3 업무상 유의사항

- (1)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나 조치 결정 등으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고 이를 우회적으로 회수하거나 반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 (2) 대금 지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받은 후 이를 납품대금 등에서 감액 처리하면 안 된다.

3.13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법 제 3조의 4조)

3.13.1 주요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3.13.2 범위반 유형(Don'ts)

-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사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2)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 가하는 등 다음과 같은 약정
- (3)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 (5)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6) 기타 위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7)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
 - ①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②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③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 ④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3.13.3 업무상 유의사항

일정한 유형의 특약을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부당하면 처벌됨에 유의해야 한다.

3.13.4 관련사례

<p><소프트웨어 업종 4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6건하2535등)</p>
<p>[사실관계]</p> <p>한화에쓰앤씨는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안전 사고 관련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전가하는 조항”설정</p> <p>시큐아이는 “원사업자의 업무 축소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업무가 필요 없다고 원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특근 및 근무 시간 외 잔업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원사업 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는 조항”설정</p> <p>농협정보시스템은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납품 기한을 변경하거나 계약 진행을 보류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 물품을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 “ 원사업자의 과실 여 부를 따지지 않고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모든 손상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조항”, “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 등을 발견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계약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수급사업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설정</p>
<p>[공정위 판단]</p> <p>원사업자는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 서는 아니되며, 3개 사는 귀책 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부당 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p>

4. 위반시 제재

4.1 개괄

<p>행정적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조치: 시정권고, 특약 삭제나 수정, 시정명령(작위, 부작위 등)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과징금부과: 하도급대금의 2배이하(법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 •상습 법위반자 명단 공표(법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입찰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3년간 벌점 10점 초과)
<p>행정적 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 부과: 2억원 이하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 •조사거부: 사업자 2억원 이하, 개인 5천만원 이하 •서면실태 조사: 사업자 500만원 이하
<p>사법적제재 (공정위 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 2배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경영간섭/탈법행위 위반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 위반 •3배 손해배상 책임(4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 부당단가인하(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및 감액 금지) - 부당발주취소(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기술자료 유용 금지 •원칙적 고발(법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양벌규정

4.2 양벌규정

4.2.1 규정내용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하도급법 제31조).

4.2.2 규정취지

- (1) 양벌규정이란, 법위반 행위를 직접 행한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므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 범죄능력이나 수형능력이 부인된다.
- (2) 따라서, 법인이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은 부과할 수 있다.
- (3) 하도급법처럼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둔 취지는 특히 사전에 법 위반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2.3 보복조치에 대한 벌칙 강화

- (1) 하도급법상 벌칙에는 형벌인 벌금형이 있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처분이 있다. 즉, 형벌은 하도급법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과태료는 조사의 거부·방해 등 하도급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절차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2) 다만, 벌금부과에 관한 권한은 사법부에 있는 것이므로 검찰의 기소에 의하여 법원에서 벌금액을 확정하여 부과한다.

(약식기소의 경우 대개 검찰이 청구한 금액으로 결정됨).

4.3 벌금

(1) 다음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 ① 서면의 사전 발급 및 서류보존규정에 위반한 자
-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③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④ 선급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 ⑤ 부당한 수령거부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⑥ 기성 및 준공검사규정에 위반한 자
- ⑦ 부당반품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⑧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⑨ 물품구매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⑩ 하도급대금의 지급규정에 위반한 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
- ⑪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에 위반한 자
- ⑫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⑬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규정에 위반한 자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 ①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②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③ 탈법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4 과태료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5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요청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4.6 손해배상책임

기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여 유용한 경우에 적용하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7 과징금

(1) 일반원칙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2) 원칙적 부과대상

- 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위반 전력이 많아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만, 법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자율 준수노력을 지속적일 한 경우
- 나. 외부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경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한 경우

4.8 과징금액 산정 단계

(1) 1단계: 기본과징금

- ①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 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20%~80%, 다만 50% 미만인 부과 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범위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함)을 곱하여 산정. 다만,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
- ②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4.9 하도급 대금 자진 시정시 과징금 미부과

- (1)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 또는 지급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이 미부과 되며, 다만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액 이 3억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자진시정을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 (2)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그 경고에 대한 벌점은 0점으로 하며, 다만, 3년동안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벌점을 면제받은 적 이 2회 이상 있는 사업자는 누산 벌점 산정 시 벌점을 면제받은 경고 중 최초의 경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고마다 0.5점씩 벌점을 가산을 하게 된다(벌점은 2016년 1 월 25일부터 시행)

제4절 공정거래 사건 처리절차

-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조직관리자 승진/평가/포상/징계 등 심의의결권
- 임원 선임권, 성과평가권, 승진심사권, 임원 보수 결정권
- 고문 및 자문역 선임권

1. 공정위 조사절차

1.1 조사 주체

(1) 사무처 소속의 사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6개국

1.2 조사 단서

사건의 조사는 '신고' 또는 조사관의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되며, 직권발동은 주로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조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등과 같이 연초에 조사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이뤄진다.

1.3 배당과 사전심사

신고 또는 직권발동에 의해 개시된 개별사건은 담당과정에 의해 개별 조사공무원 (통상 사무관)에게 배당되며, 배당 받은 조사공무원은 당해 사건이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사전심사하며, 사전심사결과 ① '피조사인이 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②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③ '5년의 조치시효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불개시결정"을 내리며 사전심사 결과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착수보고"를 하게 된다.

1.4 사건번호·사건명 부여와 조사의 실시

사건착수보고가 이뤄지면, 심판관리관실에서 '사건번호'와 '사건명'(예: 2008공동12 000에 대한 건)을 부여함으로써 정식으로 하나의 조사사건이 되며, 이후 조사공무원은 조사권을 발동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 대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1.5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의 조치

(1) 약식절차 회부

① 당해 조사사건이 소회의의 소관사항인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조치의 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 피심인이 이를 수락하면 “약식절차”에 회부하며, 약 식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위원들의 서면결의로 처분이 결정되나,

가. ‘심사관조치의견에 고발이나 과징금납부명령이 포함된 경우’ 또는

나. ‘피심인이 심사관조치의견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위원회 상정

①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공표명령 등의 처분이나 형사고발조치 등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며 사무처장은 자신의 명의로 조사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며, 이때 중요한 사안은 ‘전원회의’에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에 각각 상정하며, 외국의 경쟁당국은 조사사건의 위원회 상정 여부에 관하여도 위원회가 결정(예: 일본 의 심판개시결정)함에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일방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심사보고서의 송부 및 의견서 제출 고지

조사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됨과 동시에, 심사관은 피심인(피조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고지하며, 실무상으로는 심사관이 사전에 심판관리관과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일자를 잠정적으로 정한 후 그 일자의 약 3~4주 이전에 조사사건을 위원회 에 상정함과 동시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이때, 피심인에게는 심사 보고서 중 “심사관조치의견”을 빼 나머지 자료(즉 ① 표지 ② 제안이유 ③ 행위 사실 ④ 위법성 판단 ⑤ 적용법조 ⑥ 첨부자료)만이 송부된다.

③ 피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공정위 심판절차

2.1 심판 주체

(1) 위원회이며, 안건에 따라 중요한 사안은 “전원회의”가 경미한 사안은 “소회의”가 담당하며, 전원회의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부위원장 포함)과 4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위원 4인은 3인의 대학교수와 1인의 변호사로 구성됨.

① 의장의 직은 위원장이 수행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수행

(2) 소회의는 총 3개이며, 각 소회의는 1인의 상임위원과 2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의 직은 상임위원이 수행.

2.2 주심위원 지정과 심결보좌

(1) 주심위원은 법원의 주심법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심결보좌기구 보좌를 받으며, 전 원회의 사건에서는 위원장이 임의로 주심위원을 지정한다.

(2) 심결보좌는 심판관리관실이 담당하며, 심판관리관실의 3개 담당관(경쟁심판/협력 심판/소비자거래심판)은 상임위원 3인과 일대일 대응관계로 심결보좌업무를 수행 하고 심사관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견서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작성·보고한다.

2.3 심의기일 및 장소의 지정

(1) 심의기일은 의장이 지정하며, 피심인에게는 지정된 일자의 5일 전까지 통지하며, 통상 전원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소회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되며, 피심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심의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주심위원의 의견을 들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심리장소는 위 심판정으로 지정된다.(단, 지방사무소에서의 순회심판은 예외)

2.4 합의

(1) 합의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원칙적으로 심의가 종료된 당일에 마쳐지며, “위법성 인정”에 대한 합의 후, ‘시정조치’·‘과징금부과’·‘법위반사실

공표명령·‘형사고 발’ 등의 “제재수단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합의를 한다.

- (2)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회의는 3인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단, 소회의의 경우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전원회의에 회부된다.

2.5 의결서 작성

의결서는 심판관리관실에서 작성, 원칙적으로 합의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작성 한다.

3.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3.1 심판기능으로서의 공정위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37조의2, 제42조 ①항)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37조의2, 제42조 ②항)
소관사항	법규 등의 제·개정 이의신청의 재결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공정거래법 제37조의 3)	일반사건, 승인·인정·인가사항 집행정지의 결정, 과태료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1) 심의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① 심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과정을 말한다.

② 심사관

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에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인지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나. 이러한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국장과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 된다.

다.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게 된다.

③ 피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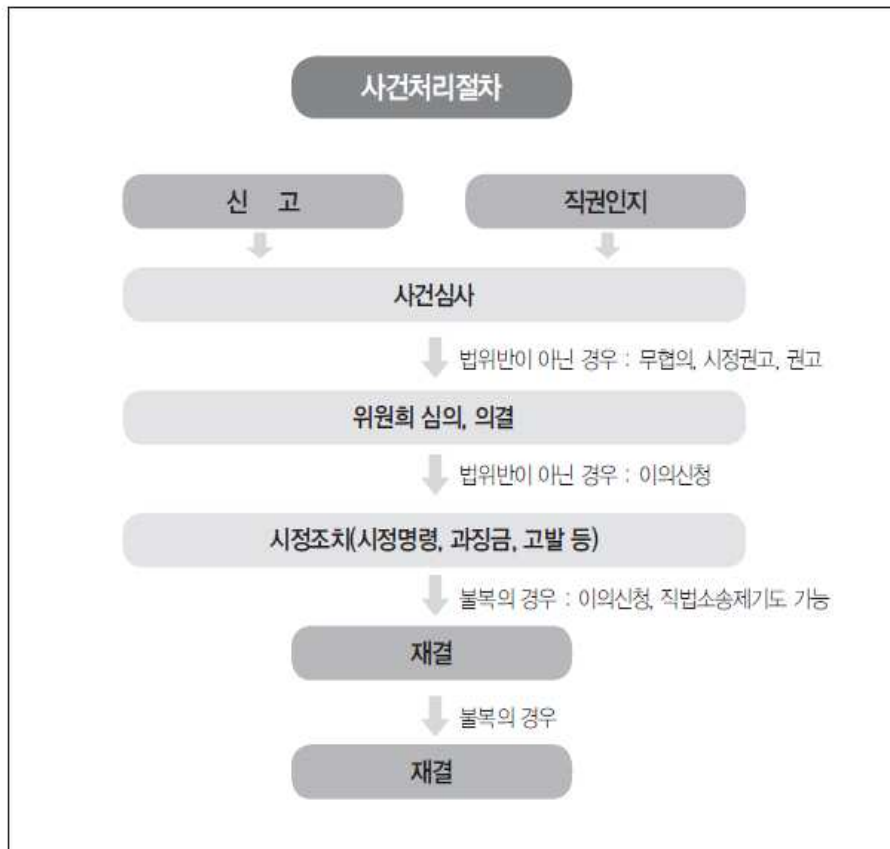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④ 이의신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3.2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1) 사건절차 흐름도



3.2.1 인지단계

- (1) 법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49조).
- (2) 위반혐의는 직권인지가 원칙이며, 신고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 (3) 신고 접수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한다.

3.2.2 조사·심사 단계

- (1)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 (2) 조사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제시한다.
- (3)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한다.

3.2.3 심의·의결 단계

- (1)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 (2)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참가,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3) 합의는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위법여부, 조치내용 등에 대해 논의·합의하는 과정이다(공정거래법 제43조).

3.2.4 의결 결과 통지

합의 결과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심사관이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이로써 피심인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공정거래법 제45조).

3.2.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유형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다.

3.3.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3.3.1 심의준비 절차제도

정식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간에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서면 등으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제도

3.3.2 심의 속개제

심의를 신중하게 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를 한번에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에 심의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3.3 심의 분리제

공동행위와 같은 위반행위 건에 대한 심의시 특정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과 별도로 심의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경쟁사에 공개될 우려가 있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제도

3.3.4 출석 시차제

- (1) 해당 안건의 심의시작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의시작 시간까지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 등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당 안건의 심의 시간을 예측하여 그 시간에 맞도록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제도
- (2) 기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공개, 프리젠테이션 시설의 설치·운영, 외국인들의 심의 참가시 편의제공을 위한 통역부스 설치 허용 등 다양한 심결절차 응용

3.4 불복절차

3.4.1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 (1) 공정위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30일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53조).
- (2) 시정조치 명령을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53조의2).

3.4.2 행정소송

- (1)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54조, 제55조).
- (2)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3.5 사전 심사 청구 제도

- (1)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관계법에 위반되는 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2)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의견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확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3) 다만, 구체성이 없는 경우 자료부족으로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확정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하다.

3.6 동의명령제도

- (1) 동의명령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 (2)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불공정기업 판정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공정위 역시 법 집행의 효과를 통상적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구현하면서도 피규제자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위 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3) 소비자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통상의 시정조치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가격 인하, 손해보상 등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7 전속고발권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전속고발권은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공정 위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 관, 조달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해 고발요청 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하여야 한다. 단, 현재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